

A Study on “Re-nationalization” in Divided Nations: The Case of Taiwan from 1992 to 2016*

Lee Young Soo**

Hanshin University

Lee Jun He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aiwanese case from 1992 to 2016 through a modified and expanded version of Rogers Brubaker’s triadic nexus framework in order to explain how separatist nationalism is triggered and unfolds in divided states. In doing so, the study conceptualizes the reconfiguration of a previously integration-oriented national identity without changes in sovereignty or territorial boundaries as “re-nationalization,” and theorizes this phenomenon in the context of divided states.

The analysis shows that Taiwan’s re-nationalization was triggered by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brought about by democratization, as well as by shifting perceptions of relations with China—the counterpart of division—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s a result, waishengren (Mainlanders), who became positioned as a minority group, and the Kuomintang, which represented them, pursued an alternative form of nation-building aimed at restoring an integrative identity. Meanwhile, China, as the external homeland, interpreted Taiwan’s re-nationalization as a betrayal by a kin group and attempted to intervene by incorporating not only the national minority but the entire Taiwanese population into a “claimed co-ethnic”.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triadic nexus framework can also explain ethnic politics in divided states, and it offers a new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a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2026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urasian Studies.

** First Author, Lecturer, Hanshin University. E-mail: ypra1989@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E-mail: vanguard7615@khu.ac.kr

Analyses & Alternatives Vol. 10 No. 2. June 2026.

DOI: 10.22931/aanda.2026.10.2.005

analytical perspective for research on divided states and theories of nationalism.

Keywords

Divided nation; Triadic nexus; Brubaker; Cross–Strait relations; Taiwanese nationalism

분단국가의 ‘재국민화’에 대한 연구: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수**

한신대학교

이준희***

경희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분단국가에서 분리적 민족주의가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촉발·전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사례를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triadic nexus) 틀을 수정·확장하여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주권과 영토의 변경 없이 기존의 통합 지향적 민족정체성이 재구성되는 현상을 ‘재국민화’로 개념화하고, 이를 분단국가 맥락에서 이론화한다. 분석 결과, 대만의 재국민화는 민주화에 따른 권력구조 변화와 탈냉전 이후 분단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인식 변화로 촉발되었다. 그로 인해 소수민족으로 위치 지워진 외성인 및 이를 대표하는 국민당은 통합적 정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한 대안적 국민화를 추구하였다. 한편 외부 조국으로서 중국은 재국민화를 친족 집단의 배신으로 해석하고, 소수민족을 넘어 대만 국민 전체를 ‘동포로 규정된 집단’으로 포섭하려는 개입을 시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삼각연계 틀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분단국가의 민족정치 역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분단 국가 연구와 민족주의 이론에 새로운 분석적 시각을 제시한다.

주제어

분단국가, 삼각연계, 브루베이커, 양안관계, 대만민족주의

* 본 논문은 2026년 한국유라시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 제1저자,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초빙교원. 이메일: ypra1989@gmail.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이메일: vanguard7615@khu.ac.kr

I. 서론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국가 간의 교전관계”로 규정하며 기존의 민족적 동질성,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두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다.¹⁾ 분단 이후 상대와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해온 국가가 돌연 스스로의 민족성을 재정의하며 분리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현상은 북한만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대만의 민진당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이탈해 대만 독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창당 38년 만에 '12년 연속집권' 역사 쓴 독립 성향 대만 민진당,” 2024), 1970년대 동독은 스스로를 부르주아 독일민족인 서독과 분리되는 사회주의 독일민족이라 주장하는 이민족론을 제기했다(이동기, 2024, p.117).

그렇다면 이러한 분단국가에서의 분리적 민족주의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가? 분단국가와 상대국, 그리고 국내정치세력들은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은 다시 어떤 대응을 촉발하여 분리적 민족주의의 강화 또는 억제를 가져오는가?

이와 관련해 대만의 사례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접근을 적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1949년 대만으로 이동한 중화민국 정부는 오랫동안 중국 본토와 단일한 민족·역사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96년 총통 직선제를 계기로 리덩후이(李登輝)가 ‘신대만인’ 담론을 제시한 데 이어, 민진당의 천수이벤(陳水扁) 정부는 대만 독립을 적극 천명함으로써 기존 민족정체성의 구조적 변환을 시도했다. 여기에 중국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국민당은 민진당에 반발해 중국과의 민족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대항적 민족주의를 내걸었다. 그 결과 양안관계와 대만 국내 정치에서는 민족주의적 해석의 충돌을 두고 새로운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① 새로운 정체성을 주장하는 집단(민진당·본성인), ② 기존 단일민족 서사를 유지하려는 집단(국민당·외성인), ③ 그 민족성을 근거 삼아 개입·반응하는 분단 상대국(중국) 사이의 상호해석과 반응의 연쇄적 구조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대만은 북한과 동독의 사례에 비해 비교적 개방된 사회이기에 행위단위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대응하기 수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2023년 12월 말에 8기 9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 공식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에 재확인되었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2026).

본 연구는 복수의 행위자들이 얹혀 있는 민족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의 ‘삼각연계(triadic nexus)’를 대만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세 행위자가 서로의 행동을 어떠한 인식틀로 해석했으며 그 해석이 어떤 대응과 추가적 상호작용을 야기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삼각연계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대만의 분리적 민족주의를 추동한 동인은 무엇인지,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외성인/국민당은 양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천명한 이후,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분리적 민족주의는 중요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북한과 동독이라는 개별사례에 대한 분석 혹은 두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대체로 분리적 민족주의를 촉발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분단상대국의 우세와 그들에 동조할 수 있는 내부 집단에 대한 엘리트들의 우려를 지목한다.²⁾ 이러한 대응적 성격은 분리적 민족주의의 촉발과 전개를 관련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로 엘리트들의 의도에 주목하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다른 분단국가의 분리적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만의 민족주의는 1990년대 이후 대만의 급격한 민족정체성 변화와 이에 따른 양안관계 변화로 이전부터 풍부히 연구된 주제였다. 하지만 주로 독립에 대한 대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본성인-외성인이라는 3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접근은 부족한 편이었다.³⁾ 또한 다른 분단국가의 사례와 비교될 수 있는 분리적 민족주의라는 시각의

-
- 2) 손선홍은 북한과 동독의 두 국가론 비교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두 국가론이 등장한 배경으로 분단상대국과의 국력격차와 그로인한 주민들의 동경 등 열세인 분단상황을 언급했다. (손선홍, 2025). 황수환도 두국가론의 등장배경으로 체제경쟁의 열세, 그로 인한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을 언급한 대(황수환 외, 2024). 이동기는 동독의 두 국가론을 서독의 정치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하면서 단일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독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어려웠음을 지적했다(이동기, 2024).
- 3) 강귀영과 임규선은 주로 대만 내부의 정치적 변화와 담론에 주목했다. 이들은 중국의 역할도 다루었으나 주로 압박을 통한 대만 내부의 반중감정을 촉발하는 요소로 파악했다(강귀영, 2012; 임규선, 2022). 카베스탕(Jean-Pierre Cabestan)은 마잉주 정권의 재중국화가 오히려 대만화라는 반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주로 대만 내부의 정체성 변화 문제에 집중했다(Cabestan, 2017).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분리적 민족주의를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기보다 엘리트들의 의도와 그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분단국가라는 공통의 범주 속에서 나타나는 분리적 민족주의를 일반화하고 이론화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를 분석틀로 채택하여 대만 사례를 분석한다. 삼각연계는 국민화 하는 국가, 소수민족, 외부조국이라는 세 행위자가 서로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하나의 관계적 구조로 포착함으로써, 민족주의 형성과 변동을 단일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상호작용의 산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 틀을 분단국가 맥락에 확장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분절적·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분단국가의 분리적 민족주의를 보다 일반화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

본 연구는 대만에서 형성된 분리적 민족주의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 논의를 핵심 분석틀로 활용한다. 브루베이커는 민족(nation)을 실체가 아닌 실천의 범주이자 제도화된 형식이며 우발적 사건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간기와 탈냉전기에 중동부 유럽의 다민족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문제를 국민화하는 국가(nationalizing states), 소수민족(national minorities), 외부의 민족적 조국(external national homelands) 간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입장들 간의 투쟁의 영역(field)으로 이해된다.

먼저 ‘국민화하는 국가’는 인종문화적 기준으로 정의되며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시민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핵심민족(core nation)’을 전제로 한다. 핵심민족은 국가의 정당한 ‘소유자’이지만 독립 이전에 해당 민족이 겪은 차별의 유산으로 인해 그 국가 내부에서 문화적·경제적·인구학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활용하여 핵심민족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정적 혹은 보상적인 국민화 민족주의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속하면서도 핵심민족이 아닌 집단들은 동화나 차별, 추방의 압력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민화 민족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외부 민족적 조국’이라는 초국경적

민족주의가 등장한다. 조국 민족주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co-nationals)의 처지를 감시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권리—더 나아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해당 국가의 민족적 동포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화 정책과 관행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될 때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국민화 압력과 동포의 보호라는 상호 적대적인 두 민족주의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바로 소수민족들이다. 소수민족들 역시 자신들만의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민족성을 근거로 주장을 제기한다.

세 영역 사이의 관계는 각 영역 내부 및 각 영역을 구성하는 관계들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여기서 채택한 민족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일관되고 근본적으로 관계적이다. 삼자적 관계 연계 구조(triangular relational nexus)의 핵심적 요소는 “상호 영역 간 감시(inter-field monitoring)”다. 각 영역의 행위자들은 다른 두 영역에서 벌어지는 관계와 행동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이러한 지속적 상호 감시는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받아 적는 수동적 과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종종 다른 영역의 상황에 대한 해석은 논쟁의 대상이 되며, 특정 영역의 내부에서 재현을 둘러싼 투쟁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로 기존 입장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입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Brubaker, 1996).

2. 삼각연계의 분단국가로의 적용

물론 대만-중국의 분단구조는 브루베이커의 원 사례와 동일하지 않다. 양안은 뚜렷한 인종적 동질성, 공통된 역사적 전통, 성공적인 정치적 통일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상태 직후에 두 개의 정치단위로 나뉜 분단국가(divided nation)로 분류된다. 반면 브루베이커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간기와 탈 냉전기의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동일한 정치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던 집단들 사이에서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야기된 내부적 원인들로 분단된 분립국가(partitioned country)에 가깝다(Henderson&Lebow, 1974, p.434). 즉, 전자가 동일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강요된 경우였다면, 후자는 동일하지 않은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강요되다가 해체된 상반된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 틀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 분단의 한 측이 기존의 단일민족정체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분리적 정체성을 공식화할 때, ‘국민화하는 국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통합 지향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국내 집단은 국민화 압력을 경험하며 '소수민족'의 위치에 놓인다. 분단의 상대국은 이러한 정체성 변화에 대해 자신이 '외부조국'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며 개입하거나 반응한다. 따라서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재편은 브루베이커가 말한 삼각연계의 구조적 상호작용과 유사한 양상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대만(국민화 하는 국가)-국민당/외성인(소수민족)-중국(외부조국)의 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것이 대만의 사례에 부합하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삼각연계에서 소수민족에 해당하게 되는 국민당/외성인들이 '소수' 인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집권기회를 누리는 정당과 그 지지세력을 소수로 부르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루베이커의 삼각연계를 구성하는 범주들은 민족인구학적 통계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의미하며, 소수민족도 그러하다(Brubaker, 1996, p.5). 또한 선행 연구들은 집권세력 형성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인구수를 지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들도 거주국가의 핵심민족과는 다른 민족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으로 구분했다(Brubaker, 1996, pp.169-178; Brubaker, 2011). 이러한 시각에서 외성인/국민당 역시 정치적 입장에서 소수민족이라 할 수 있다.

브루베이커 스스로 삼각연계가 유럽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중국-내몽골-몽골, 인도-카슈미르-파키스탄, 태국-베트남계 주민-베트남, 이스라엘-팔레스타인-아랍국가들 등 비유럽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도 확장되어 왔다(Brubaker, 1996, p.7; Bulag, 2010, p.19; Constantin&Carlà, 2025, p.14; "东南亚局势变迁中的“国族共同体”演进," 2014; Sorek, 2015, p.13). 그러나 분단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부재하다.

하지만 삼각연계 틀을 응용하여 외부조국이 되는 근린국가와의 근연성(친밀성)을 가진 민족성을 재편하는, 본연구의 사례와 유사한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독립 이전의 아일랜드를 분석한 스탠브릿지(Karen Stanbridge)의 연구, 2014년을 전후한 우크라이나를 분석한 페도렌코와 움란트(Kostiantyn Fedorenko & Andreas Umland)의 연구와 바실리에비치(Hanna Vasilevich)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가 분단국가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민화는 영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재촉발될 수 있다. 브루베이커는 국민화를 다민족제국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에서 핵심민족이 국가의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동기에서 촉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민족이 그들의 교정적·보상적 민족주의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국민화는 독립 이후에도 영속적으로 진행되거나 재촉발될 수 있다.

바실리에비치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언어 문제가 부당한 배경으로 마이 단혁명 이후 이중언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하려던 국민화를 지목했다(Vasilevich, 2024, pp.126-127). 이러한 정체성 변화시도는 기존의 영토·주권 구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적 정체성 체계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에, 기존의 국민화와 구분하여 ‘재국민화(re-nation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소수민족 집단은 자신의 구별적인 민족성(nationality) 인정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브루베이커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입장을 핵심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성과 그에 기반한 정치적·문화적 권리 요구라고 보았다(Brubaker, 1996, p.60).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삼각연계 사례의 개별적 특징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아일랜드의 연합주의자(unionist)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들은 국민화에 직면한 소수민족으로서의 대응으로 거주 국가(host state)와 그들의 친족국가(kin state) 간 연결을 회복하는 대안적 전체 국민서사를 조직하고, 정치적 동원, 집권을 시도했다(Stanbridge, 2005, p.37; 이영수, 2025, pp.253-264). 때문에 이와 같이 세 개의 영역이 종족·문화적으로 밀접한 사례에서 소수민족은 ‘인접한 친족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핵심민족의 민족성을 다수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정치적 입장’을 의미할 수 있다.

셋째, 국민화하는 국가와 외부조국 간 근연성이 높을수록 국민화가 초래한 변화는 ‘배신’으로 읽힐 수 있다. 페도렌코와 움란트는 우크라이나의 사소한 문화적·정치적 재지향조차 러시아에게는 배신으로 해석되어 격렬한 반응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Fedorenko & Umland, 2022, p.65). 이는 외부조국이 내세우는 ‘공유된 정체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국가 내부의 변화는 더욱 과도한 위협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배신을 되돌리기 위해 외부조국이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국민화하는 국가의 핵심민족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정할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 핵심민족은 외부조국이 자국의 친족집단이라 규정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러한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동포로 규정된 집단(claimed co-ethnic)”⁴⁾이 된다.

이러한 시사점을 종합하면, 분단국가에서 삼각연계는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될 수 있다. 첫째, 핵심민족이 국민화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재국민화가 촉발될 수 있다. 분단국가에서 그러한 재설정에는 기존의 통합 지향적 민족성을 뒤집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4) 스테파노비치(Dejan Stjepanović)는 알바니아의 블라흐(Vlach)인과 세르비아의 부네박(Bunjevci)인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개념을 제시했다(Stjepanović, 2015, p.144).

둘째, 기존의 통합 지향적 민족성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새로운 국민화 압력 속에서 정치적 소수민족으로 위치 지워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수민족은 거주국가와 친족국가 간 연결의 회복을 주장하는 ‘대안적 국민화(alternative nationalization)’를 추진하는 적극적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분단의 상대국은 통합 지향적 민족성을 버리지 못한 집단에 대해 ‘책임’을 주장하며 개입을 시도하는 외부조국이 될 수 있다. 특히 분단국가 간 공유 정체성이 강할수록 국민화하는 국가의 변화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또한 외부조국이 주장하는 책임의 범위는 분단국가 국민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표 1> 브루메이커의 삼각연계와 분단국가에서 삼각연계의 비교

	브루메이커의 삼각연계	분단국가에서 삼각연계
국민화하는 국가	주로 신생 독립국에서 핵심민족의 권익을 교정, 보상하기 위해 국민화가 촉발	기존의 국민화가 핵심민족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로 촉발. “재국민화” 주권 영토의 변경 없이도 발생.
소수민족	핵심민족과는 구별되는 민족성 인정 및 그에 기반한 정치적·문화적 권리 요구	친족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핵심민족의 민족성을 다수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주장
외부조국	국민화 압력에 직면한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주장	소수민족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재국민화라는 ‘배신’을 교정할 책임을 주장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분단국가에 맞춰 보완된 브루메이커의 삼각연계 틀을 이용하여 민족문제를 둘러싼 대만, 외성인/국민당, 중국 간의 상호해석-대응-재해석의 순환을 시기 순으로 분석한다. 연계를 구성하는 영역들이 서로의 행동을 감시하고 이를 각자의 인식 속에서 해석해 행동한다는 브루메이커의 지적에 따라 각 장들이 서로의 어떤 행동에 주목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인과적 순환을 살펴봄으로써 해석-반응의 구조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대만의 재국민화 동인파, 외성인/국민당과 중국이 삼각연계의 맥락에서 보인 상호작용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만국내정치 및 양안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정책 자료, 주요 정치가들의 발언 및 회고록을 활용할 것이다. 연구대상 기간은 재국민화의 촉발과 외부조국의 반응, 소수민족의 대안적 국민화 담론 제기라는 한 차례의 순환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대만인 담론을 제기한 리덩후이가 집권한 1992년부

터 대만화에 반발한 국민당이 재집권하여 중화민족주의 담론에 기반한 재중국화를 추진한 마잉주 집권기간인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III. 대만의 분리적 민족주의와 양안관계의 전개

1. 리덩후이 정권기(1992~2000)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대만을 접수한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정권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는 중화민족주의적 관념에 따라 대만을 통치했다. 그 결과 이 시기 대만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대만 독립파들조차도 ‘우리 중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鄭鴻生, 2012, p.58). 장제스(蔣介石)-장징궈(蔣經國) 부자의 국민당 정권은 중화민국이 대륙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관념 하에 대륙광복이라는 무력통일론을 주장했으며 대륙과는 3불 정책을 통해서 소통을 거부했다. 이 시기에 하나의 중국이란 오로지 중화민국을 의미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공비’에 불과했다(강귀영, 2012). 하지만 1988년 장징궈 총통이 사망하고 부총통 리덩후이가 최초의 본성인 출신으로 총통을 계승하면서 대만의 정체성과 대륙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김영신, 2001, pp.337-344; 장성구 & 오회연, 1992, pp.44-47).

집권 후, 리덩후이의 초기 목표는 양안 간 관계완화에 맞춰졌다. 리덩후이는 수차례의 개헌으로 헌법의 적용범위를 대만으로 축소시키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 통치를 인정했다. 또한 1990년 총통선거 이후 총통부 직속 국가통일위원회, 행정원 산하 대륙위원회, 민간기구인 해협교류기금회를 설치하면서 적극적인 양안정책에 나섰다. 1991년 리덩후이는 공식적으로 무력통일인 반공대륙을 포기하고, 점진적, 장기적인 통일을 천명했다. 1992년에는 각자의 해석이 다른 하나의 중국이라는 소위 ‘92공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유지했다(강귀영, 2012, pp.75-77; 79-91). 이는 국민당의 기존 목표와 대만화의 괴리, 그리고 선부른 조치가 중국 침공을 부를 수 있다는 점, 즉 카베스탕의 지적처럼, 새로운 대만 민족을 건설하려는 열망과 현실적인 지정학적 조건 및 가능한 정치적 선택 사이의 격차는 컸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과의 관계 유지 및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대만 민심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Cabestan, 2017, p.45).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민주화의 영향, 특히 집권세력인 국민당 내부 구성의 변화였다.

리덩후이는 장징궈가 살아 있던 시기까지만 해도 강력한 대만독립 반대론을 주장하여 정권 내에서 승진할 수 있었다(강귀영, 2012, pp.70-71).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국민당은 장징궈의 개혁으로 당원과 중앙지도부의 과반수가 대만인으로 구성되는 대만화를 겪었다(Cabestan, 2017, p.44). 그로 인해 리덩후이 등 본성인 출신이 '주류파'였고 외성인들은 '비주류파'가 되었다. 외성인 출신으로 지금까지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비주류파는 여전히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국민당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화시기에 이르러 대만인들은 중국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독재국가로 여겼고 대만을 독립적 정치 공동체로 인식했다. '지식회'를 비롯한 본성인 출신 파벌들은 조심스럽게 독립된 대만을 지지했다(Hood, 1996, pp.471-476). 게다가 1992년 입법위원선거는 이런 권력 구성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 선거에서 국민당이 참패하자, 리덩후이는 책임을 비주류파에게 물어 요직에서 제거했다. 이에 반발한 비주류파는 국민당을 탈당해서 중국신당(이하 신당) 등을 조직했다(강귀영, 2012, pp.73-74; Hood, 1996, pp.476-478).

당내 권력기반을 강화한 리덩후이는 본격적으로 국민당을 일제와 동일한 외래정권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판적 의식을 드러냈으며, 국민당과 정부의 본토화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1995년에 리덩후이는 '중국국민당이 아닌 대만국민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리덩후이는 유엔 재가입을 시도하면서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 하나의 주권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 했다. 이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치실체'라는 것으로 중국을 역사, 지리, 문화, 혈연적인 의미로 삼고 중국과 중화민국이 대등한 정치실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향토교육을 강화하고 민남어, 각 종족의 역사, 대만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등 교육의 탈중국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28사건에 사죄하고 배상하는 등 과거사를 상징화함으로 국민단합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강귀영, 2012, pp.75-77).

최초의 총통 직선제 선거였던 1996년 대선에서 비주류파가 참패하고 리덩후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 재선되면서 그의 기반은 더욱 강해졌다(Wu, 2005, pp.42-44). 이에 힘입어 리덩후이는 민진당의 의제를 흡수하고 국민당을 변화시키려는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그의 노력은 큰 변화를 가져와서 외성인 출신 국민당원 마잉주(馬英九)도 1998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을 신대만인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자신을 오로지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중화민국 국민이 25%였으며, 중국인으로 정의한 20.7%를 상회한 상황이었다. 1999년에 이르러 대만인 정체성은 39.6%로 급증했으며, 중국인 정체성은

12.1%로 감소했다(Cabestan, 2017, p.46). 이런 대만인들의 정체성 변화에 힘입어, 1999년에 리덩후이는 양국론을 주장,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함으로 중국의 대만 정책의 핵심인 일국양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1994년 생명공동체, 신대만인 담론을 제시하면서 대만인은 중국인에서 분리된 신민족이라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에서 분리되어 대만 내부의 여러 종족(본성인, 외성인)을 통합한 대만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독립된 대만국가 수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했다(임규섭, 2022, pp.41-43).

리덩후이의 이러한 입장은, 총통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만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강귀영, 2012, pp.71-72; 107-108). 리덩후이는 퇴임 후의 저작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력히 표현했는데 그는 주로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주장에서 영감을 얻어 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이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며 족군대립 해소,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본토화와 민주화 전진, 부정부패 청산, 대만의 체제 수호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리덩후이, 2008, pp.114-122).

리덩후이의 행보는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그 결과, 중국은 대만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무력침공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1995년 하반기부터 1996년 3월까지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 대만 독립운동에 대한 경고를 보내면서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홍콩과 마카오를 회수한 후 중국은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江澤民)이 직접 중공중앙대만공작영도소조 조장을 겸직하고 대만사무관공실을 강화하는 등 대만정책을 주도하고자 했다. 2000년 2월 21일에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라는 백서를 발표, 외국의 대만 침략 시로 한정했던 무력행사 조건을 대만이 평화통일 교섭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로 확대하면서 강경한 독립 성향의 민진당의 천수이벤 당선을 저지하려 했다(주광철, 2003, pp.47-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수이벤이 당선되면서 대만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리덩후이 시기, 국민당도 대만화 담론을 일부 수용하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강화됨에 따라 대만민족주의는 차차 시민민족주의의 성격으로 전환, 대만민족주의의 타자는 기존의 투쟁 대상이었던 국민당에서 중국으로 전환되었고, 대만민족주의에는 반중국 성격이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임규섭, 2022, pp.41-43).

2. 천수이벤 정권기(2000~2008)

계엄령 해제 이후 '당외 세력'과 민진당은 국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균열로 대만민족주의와 중국민족주의 간의 대립을 적극 활용했다. 민진당은 종족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급진적인 독립론을 제기, 국호, 국기, 국가의 개정과 대만어 사용강화를 주장했다(임규섭, 2022, pp.41~43). 또한 92공식에 대해서도 국민당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허구로 보고 이후 천수이벤 집권 이후 그 존재를 부정했다. 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각자 해석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이며, 결국 자원이 많은 중국이 해석권을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Yi, 2017, p.2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추구하며, 중국과는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대만 독립 노선을 완화하고 중국과 경제교류 확대를 긍정하는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우선적으로 3차 대만 해협 위기의 충격과 더불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Wu, 2005, p.44). 또한 중화민국 체제 인정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봉합된 결과였다. 민진당 내에서는 중화민국 체제를 인정하는 미려도파와 중화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대만공화국을 세우려는 신조류파의 갈등이 있었다. 양측은 1999년에 일단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은 부정하나 차선택으로 중화민국 제도를 받아들이고 중화민국이 대만이라는 공식을 수용했다(Cabestan, 2017, pp.46~47).

총통에 당선된 천수이벤은 양안관계를 일반일국으로 선포, 2004년 천수이벤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신헌법 제정, 대만 정명 운동, 국토회, 국토강령 폐지, 대만 명의로 국제연합 가입 등을 시도했다. 대만 내부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 정치체제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민족주의의 주요 기능도, 국민당의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는 종족정치에서 중국의 위협과 침략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자유중국과 독재중국의 대립, 대만의 민주적 성과를 지키기 위하기 위한 대만민족 구축과 대만독립이 추진된 것이다. 천수이벤은 대만의 역사는 400년에 걸친 자유와 독립의 투쟁이라는 해석을 내세우며 대만화에 큰 박차를 가했다. 그는 대만이 문화적 용광로이며, 심지어 일본과 미국의 문화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만 문화가 북건 남부에도 있다는 것은 대만 문화의 독자성을 해칠 수 없는 것이었다(Cabestan, 2017, pp.46~47; 임규섭, 2022, p.44).

물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

면서 대만독립 반대, 양국론 반대, 국호변경 반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반대 4불론을 내세웠다.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는 집권하면서 책임국가론, 화평발전을 내세우면서 타국과의 갈등을 피할 것이며, 대만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와 경제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이경축통 전략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인들을 상대로 대만독립론이 아닌 중국의 통일정책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후진타오는 대만에 대한 미국 간섭 배제, 양안 교류 강화, 유사시 군사대응 준비 강화 3대 원칙을 천명, 이어 2005년에는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독립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천수이볜 1기 당시 천수이볜이 신헌법 제정 국민투표 등 강경론을 전개하자 중국은 군사훈련, 대만간첩체포, 중미 군사외교 강화, 대만 기업인 회유 등 다방면으로 대만을 압박했고 천수이볜도 투표를 포기하는 등 일정부분 물러서야 했다(김옥준, 2009, pp.225-233).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압책이 오히려 양안 사이에 있던 신뢰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저해한 것을 인지하고 평화통일 양안간의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고 대만에 대한 유화조치를 대대적으로 취했다(Xin, 2010, pp.528-529). 이는 곧 민진당의 대만화에 반발하는 국민당을 비롯한 통일 지향 야당과의 접촉을 유지, 확대함으로 천수이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⁵⁾ 리덩후이 시기 국민당은 공식적으로 독립 반대,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면서 신당과 민진당 사이의 중도적 위치를 유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Wu, 2005, p.44). 하지만 천수이볜의 대만화 정책은 국민당을 ‘범람’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었으며 대만 정치는 양극화된 상태였다(Cabestan, 2017, p.47).

민진당은 야당들과 중국의 접촉에 대해서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고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강화 자체는 민진당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양안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양안 경제교류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 등 압박에 대해서 민진당은 백만 대만인 향의 시위 조직, 양안 경제교류 연기, 대응 군사훈련 강화 등 강경한 저항 입장을 천명했으나 대만 야당 세력은 이에 반대하면서 민진당 정부의 총궐기를 보이콧했다(김옥준, 2009, pp.225-233).

중국은 국민당의 태도에 호응해서 대만에 대한 경제우대정책을 제공하고 평화통일을 제안했다. 그 결과로 양안관계 안정 및 양안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하던 대만인들이 국민당을

5) 2005년 3월 천원린(陳雲林) 공산당 대만판공실 주임과 장빙쿤(江丙坤) 중국국민당 부주석이 경제협력 강화를 다룬 12개 항 합의를 이뤄냈으며, 4월 29일에는 후진타오-롄젠(連戰) 국공수뇌회담이 개최됐다. 5월에는 친민당 주석 쑹추위(宋楚瑜)가 중국을 방문했다.

지지했다(김옥준, 2009, pp.225-233). 2006년 4월 16일, 후진타오 주석이 평화적 발전이 양안관계의 주제이자 공동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인민들은 같은 피를 나누고 공통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운명공동체론이 보고에 포함되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80개 이상의 일방적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시점에서도 대만을 위해서만 10개의 특별조치를 취해 대만사회의 호응을 얻었다(Xin, 2010, pp.528-529).

3. 마잉주 정권기(2008~2016)

2008년 총선거에서 마잉주는 민진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어 총통에 당선되었다. 마잉주는 대만화/본토화를 부정하고 중화민족주의 담론을 부활시켰다. 마잉주는 민진당 정권의 서사인 '400년의 비극'에 도전하면서 청나라에서 국민당에 이르는 대륙 출신 정권들이 대만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만인들의 대일 항전 역사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대만우정으로 개칭된 중화우정, 국립대만민주기념관으로 개편된 중정기념당의 명칭을 복구하는 등 대만화 조치를 반복하고, 국민당 독재에 대한 복권을 시도했다. 이념 차원에서는 유교윤리를 강화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중화민족주의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이러한 마잉주의 일련의 정책들은 '재중국화'로 평가된다(Cabestan, 2017, pp.46-47).

대륙정책에 있어서는 92공식 하에서의 양안관계 안정화, 양안경제 통합 등을 적극 추진 하였다. 양안간의 기구간 협력, 국민당-공산당 대화 제도에 이어 2015년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 역시 양안관계가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흡족해했다. 대만인들도 양안관계가 안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양안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서 대만이 충격을 상쇄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Sullivan&Smith, 2018, pp.18-19; Yuan, 2016, pp.189-193).⁶⁾

중국 역시 마잉주의 노력에 호응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마잉주가 먼저 제안한 양안 외교 전쟁의 중단이었다. 중국은 이전까지 몇 남지 않은 대만의 수교국을 뺐는 데 주력하였으나 마잉주 시기에는 감비아를 제외하곤 단교 사례가 없었다.⁷⁾ 그리고 대만의 국제적 활동도

6) 2008-2011년 사이 대만의 총수출이 20% 증가했으며, 3분의 1이 대중 수출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리고 재임 전반에 있어 대중 수출은 천수이볜 시기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7) 그나마도 중국은 자신들은 몰랐던 일임을 강조하면서 차이잉원 당선 이전까지 감비아와 수교하지

이때 크게 강화되어 미국과 EU를 포함하여 대만과 비자 면제, 간소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53개로 증가했다. 또한 22개 국제기구에서 옵저버 및 기타 직위를 확보했고 국제기구들과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중국이 이러한 유화책에 나선 것은 리덩후이-천수이벤 시기 대만에 대한 강압책이 오히려 양안관계 악화와 통일 반대로 이어진 것을 자각하고 대만의 대륙에 대한 신뢰와 우호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Sullivan&Smith, 2018, pp.19-20; Xin, 2010, pp.532-533).

그러나 마잉주의 대중 유화책은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우선 경험 강화는 대만인 전반에게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게만 돌아가 민생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⁸⁾ 또한 양안 사이에 많은 협력과 개선이 있었으나 정작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반면 미국의 대만 지원 능력은 감소하면서 대만 안보 문제가 대두되었고, 양안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에 의한 간접행위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 무엇보다도 마잉주는 양안관계 개선에 있어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통과에 있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를 강행하려다가 결국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運)이라는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 2016년 입법원 선거와 대선에서 모두 참패해 민진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이것은 마잉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거부였으며, 마잉주의 중국화 정책은 그와 국민당을 주변부로 밀어냈다(Sullivan&Smith, 2018, pp.20-23; Yuan, 2016, pp.194-203).

해바라기 운동은 급격히 변화한 대만인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었다. 정홍생(鄭鴻生)에 따르면 이미 마잉주 정권 출범 시점에 이르러 대만인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여기는 것은 곧 대만이 중국에 병탄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2015년에는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대답이 60.6%였으며, 중국인이란 응답은 3.5%로 낮아졌다. 대만에게 있어 중국은 타자가 된 것이다(鄭鴻生, 2012, p.58; Yuan, 2016, p.193). 이미 대만의 학생들은 마잉주의 양안교류 확대에 반발하여 2008년 산딸기 운동을 일으킨 바가 있으며,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은 물론,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만인들의 우월의식, 대만인이라는 독자적 문화 정체성,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붕괴, 경제침체와 정치불신 및 이로 인한 양안관계 확대에 대한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입법원 점거 시위로 이어지게 된다(이광수, 2015, pp.8-33).

않았다.

8) 2008-2014년 사이 대만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만 증가했으며, 대학교육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물가는 2008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7.9% 상승했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게다가 마잉주도 과거 독재정권 시기처럼 통일지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타이베이 시장 시절에도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협을 추진했으나 이때도 독립, 통일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문제는 회피했다(Leng, 2016, pp.316-318). 그는 총통선거에서도 통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중시하며 중도층을 공략했다. 취임연설에서 마잉주는 통일도, 무력사용도, 대만독립도 하지 않겠다는 삼불원칙을 내세우며 국내여론을 안심시켰다(Dittmer, 2017, p.289).

IV. 삼각연계를 통한 대만 재국민화의 분석

1. 재국민화하는 국가의 동인: 권력 구조 변화와 분단 비대칭성에 대한 인식 전환

대만은 1949년 이후 국민당 정부에 의해 스스로의 주요한 민족성을 중국과의 통합적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국민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분리된 독립적 정체성으로 민족성을 재규정하는 재국민화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재국민화의 우선적인 배경은 대만의 민주화였다. 민주화는 1990년대초까지 지속된 국민당의 독재, 민족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소수 외성인이 다수 본성인을 통치하는 상황의 종결을 의미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 대륙과 통합적 정체성 추구에 억눌려 불공정한 지위에 있었다고 느꼈던 본성인들을 위한 보상적·교정적 민족주의가 뒤따르게 했다.

재국민화 과정은 권력 엘리트들의 전략에 의해 촉진되었다. 대중적 민족주의는 보통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 엘리트들이 대중적 지지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호소를 활용하면서 등장한다(Snyder, 2001, p.32). 민주화의 초기, 민진당은 핵심민족을 종족적 기준을 바탕으로 본성인 중심으로 설정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의 리덩후이는 민진당의 담론을 흡수하면서 시민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신대만인담론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경쟁은 핵심민족의 민족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국민화하는 국가라는 장 내부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재국민화의 또 다른 동인은 통합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분단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우려였다. 전 세계적인 탈냉전과 대만의 민주화는 국민당정권이 추구했던 중국과의 대결적 관계를 완화시켰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완화는 동시에 비대칭적인 우위에 있는 중국의

국력으로 종속적 관계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민진당의 92공식 무효화나 리덩후이의 신대만인담론 추진은 이러한 우려에 기초했다. 때문에 국민화는 내부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추동될 수 있다는 페도렌코와 움란트의 지적은 대만의 사례에서도 부분적인 의미를 지닌다.⁹⁾

2. 소수민족의 대응: 동화에서 대안적 국민화로

1990년대 대만의 재국민화 초기 국면에서 동화에서 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소수민족의 내부에서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화에 대한 동조에 반발한 보수파들은 정치적 지지를 상실해 몰락했다. 그 결과, 소수민족 엘리트들은 마잉주의 신대만인 선언으로 보이듯 동화로 기울었다. 하지만 리덩후이에 이어서 집권한 민진당 정권이 추진한 급진적인 대만화정책은 국민당으로 하여금 중도적 위치를 포기하게 했다. 게다가 기존 통합적 정체성 단절이 외부조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자, 국민당은 국민화 방향에 저항하기 시작했다.¹⁰⁾

이러한 저항의 목표는 다른 소수민족들과 같이 그들만의 구별된 민족성의 인정 및 보존에 있지 않았다. 국민당은 중국 대륙과의 통합적 정체성의 복원, 즉 인접한 친족국가와의 관계 측면에서 핵심민족의 민족성을 기존의 국민화 방향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이를 다른 다수 집단에게 설득하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기존의 국민화에 맞서 대안적 국민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기존의 국민화를 온전히 부정하면서 추구될 수는 없었다. 외부조국과의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는 거주국가 내에서 소수민족이 제5열이라는 의심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때문에 국민당은 기존 국민화의 유산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안적 국민화를 추진해야만 했다.

9) 페도렌코와 움란트는 우크라이나 사례 연구에서 거주 국가의 국민화가 외부조국의 개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외부조국의 개입이 국민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Fedorenko&Umland, 2022, p.61).

10) 이와 같은 소수민족 민족성의 횡단과 재규정은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1989년과 2001년 여론조사를 비교했을 때,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선택한 비율이 각각 7.2%와 4.9% 증가했다(Vasilevich, 2024, p.135).

3. 외부조국의 개입: '동포 집단'에 대한 위협과 회유

페도렌코와 움란트는 국민화하는 국가와 외부조국 간 근연성이 높을수록 국민화가 초래한 변화는 '배신'으로 읽혀 격렬한 반응을 불러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안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대만이 정치적 정당성과 문화 등에서 구별적인 정체성을 내세우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격렬히 반응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의 민족적 정전(national canon)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위치로 인해 증폭되었다. 민족적 정전은 “민족의 문화, 아니라 국가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역사서술(historiography),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영역을 연결하여 지도화하는 지리학”을 포괄한다. 체르고와 골드가이어(Zsuzsa Csergő & James M. Goldgeier)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친족 집단과 관련한 정치가 끼치는 효과는 ‘광범위하게 공유된 민족적 정전 속에서 민족적 동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Csergő&Goldgeier, 2013, p.93). 대만은 중국의 민족적 정전에서 “굴욕의 세기”였던 19세기 상실한 영토 가운데 마지막 수복 대상이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때문에 대만의 분리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은 중국 정치 엘리트들에게 핵심적인 이슈였고, 그만큼 중대하고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포 집단의 배신을 교정하기 위한 위협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반발만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그러자 중국은 파트너인 대안적 국민화를 추진하는 소수민족 집단-국민당과 함께 대만인들에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기정체성을 중국과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외부조국의 개입과 달리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해 국민화 과정을 포기시키는 것을 넘어 친족 간 통합적 정체성의 회복을 의도했다. 그런 의미에서 외부조국인 중국에게 대만인들은 ‘그들 스스로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자국의 민족적 기획안에 포함되는’ ‘동포로 규정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과 대만, 동독 등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분단국가에서 발생하는 분리적 민족주의가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촉발되어 전개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족정치의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뚜렷했던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사례를 브루

베이커의 삼각연계 틀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에 앞서 분립국가들을 주 사례로 고안된 삼각연계를 분리적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분단국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주권과 영토의 변경 없이 국민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재국민화’로 개념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사례에 재국민화하는 국가(대만), 소수민족(외성인/국민당), 외부조국(중국)이라는 틀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분석적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 대만에서 재국민화는 민주화라는 국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촉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단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 핵심민족의 민족성을 재정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가 불러온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변화는 이 과정을 촉진했다. 둘째, 소수민족인 외성인들은 통합적 정체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대안적 국민화’를 추구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핵심민족의 민족성에 대한 담론을 두고 재국민화하는 국가와 경쟁했다. 셋째, 재국민화에 반발한 외부조국인 중국은 소수민족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주국가인 대만의 국민 전체로 책임을 주장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중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동포로 규정된 집단’이 되었다.

이상의 분석은 삼각연계가 분립국가뿐만 아니라 분단국가에서 민족정치의 전개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민족정치와 분단국가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민화는 주권과 영토의 변경 없이 기존의 방향을 역진시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분단국가에 분리적 민족주의로의 재국민화는 국내 권력구조 및 국제정세, 특히 분단상대국과의 관계변화에 의해 추동될 수 있다. 둘째, 분단국가에서 삼각연계의 구성과 상호작용은 각 장들을 연결하는 친족이라는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소수민족과 외부조국은 국민화하는 국가에 대해 구별적인 민족성의 보호를 넘어, 핵심 민족의 민족성 재규정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2017년 민진당의 재집권 이후 시기의 상황 및 브루베이커의 논의가 다른 삼각연계의 각 영역 내부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재국민화를 경험한 동독 등 다른 분단국가나 루마니아-몰도바 등 친족국가 간 관계와의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의 다양화는 재국민화의 조건과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효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신. (2001). *대만의 역사*. 서울: 지영사.
- 리덩후이. (2008). 이금희 역. *최고 지도자의 조건*. 서울: 까치
- 장성구&오희연. (1992). 한인희 역. *대만현대정치사* (하). 서울: 지영사.
- 황수환 장철운 홍철기. (2024).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 Brubaker, R. (1996).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lag, U.E. (2010). *Collaborative Nationalism: The Politics of Friendship on China's Mongolian Fronti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Cabestan, J.P. (2017) "Changing Identities in Taiwan under Ma Ying-jeou". in L. Dittmer(ed.). *Taiwan and China: Fitful Embr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sergő, Z. & Goldgeier, J.M. (2013). "Kin- State Activism in Hungary, Romania, and Russia: The Politics of Ethnic Demography". in T.J. Mabry, J. McGarry, M. Moore & B. O'Leary(eds.). *Divided Nat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nyder, J. (2001).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W.W.Norton & Company.
- Sorek, T. (2015). *Palestinian Commemoration in Israe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ullivan, J.&Smith, J. (2018). "The KMT's China policy: gains and failures". in A.Beckershoff & G.Schubert(eds.). *Assessing the Presidency of Ma Ying-jeou in Taiwan : Hopeful Beginning, Hopeless En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enderson, G. & Lebow, R. N. (1974). "CONCLUSIONS". in G. Henderson, R. N. Lebow & J. G. Stoessinger(eds.).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 Jiang, Y.H. (2017). "Taiwan's National Identity and Cross-Straits Relations". in L. Dittmer(ed.). *Taiwan and China: Fitful Embr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ng, T.K. (2016). "Troubled Waters: The Conflict over Cross-Straits Relations". in Y.H. Chu(eds.). *Taiwan's Democracy Challeng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강귀영. (2012). 대만의 정치리더십과 국가정체성 변화의 상관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옥준. (2009). 민진당 정부의 대만독립노선과 양안관계. *평화학연구*. 제10권 1호.
- 손선홍. (2025).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과 우리의 대응 -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론'과 비교. *외교* 제152호.
- 이광수. (2015). 대만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2014년 해바라기운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45호.
- 이동기. (2024). 1967~1974년 동독의 통일 포기와 이민족론. *PEACES* 제3권 1호.
- 이영수. (2025). 우크라이나전쟁의 제국전쟁적 기원과 양상-뮌헨의 제국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9권 4호.
- 임규섭. (2022). 민주화 이후 대만민족주의 변동 및 추이. *대만연구*. 제21호

- 주광철. (2003). 대만해협 양안 관계에 관한 연구—중국·대만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鄭鴻生. (2012). 김하림 역.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中國近現代史研究*. 제56호
- Brubaker, R. (2011). Nationalizing states revisited: projects and processes of nationalization in post-Soviet states. *Ethnic and Racial Studies* 34(11)
- Constantin, S. & Carlà, A. (2025). The Vicious Circle of Securitization Processes in the Former Indian State of Jammu and Kashmir. *Journal of Global Security Studies* 10(1).
- Vasilevich, H. (2024). Trapped in the Quadratic Nexus: The Role of the Language Issue in Ukraine's Conflict. *Hungarian Journal of Minority Studies* 7.
- Yuan, J. D. (2016) Cross-Strait Relations 2008–2016: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4(2).
- Stjepanović, D. (2015). Claimed Co-ethnics and Kin-State Citizenship in Southeastern Europe. *Ethnopolitics* 14(2).
- Xin, Q. (2010). Beyond Power Politics: Institution-Building and Mainland China's Taiwan Policy Transi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65).
- Stanbridge, K. (2005) Nationalism, International Factors and the 'Irish Question'. *Nations and Nationalism* 11(1).
- Wu, Y.S. (2005). Taiwan's Domestic Politics and Cross-Strait Relations", *The China Journal* 53.
- Hood, S.T. (1996). "Political Change in Taiwan", *Asian Survey* 36(5).
- Fedorenko, K. & Umland, A. (2022). Конфлікт тріадичного зв'язку: політика націоналізації України, націоналізм Росії та динаміка ескалації у 2014–2019. *Ideology and Politics Journal* 3(22).
- 윤고은. (2024년 01월 13일). 창당 38년 만에 '12년 연속집권' 역사 쓴 독립 성향 대만 민진당.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3024500074>(검색일: 2026. 2. 20.)
- (2023년 12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 (2026년 02월 06일).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 (2026년 03월 2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로동신문*.
- 顾长永·萧文轩. (2014년 12월 09일). 东南亚局势变迁中的'国族共同体'演进. *人民论坛网*. <https://www.rmlt.com.cn/2014/1209/356574.shtml>(검색일: 2026.03.05.)

Manuscript: May 15, 2026; Review completed: June 09, 2026;

Accepted: June 12, 2026